

# KDI FOCUS

## KDI FOCUS

2012년 7월 18일(통권 제19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130-7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Tel 02-958-4030

Fax 02-960-0652

집필자 | 전홍택 선임연구위원(02-958-4201) · 박명호 한국어대학교 교수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 동아시아 통합전략(II): 한·중·일을 중심으로

전 홍 택 외

“ 한·중·일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3국 간 FTA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한·중 FTA 또는 한·일 FTA를 우선 체결한 후 'NAFTA 방식'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어 실질적으로 3국 간 FTA를 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 간 다양한 분야의 정책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동아시아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출범시키고 기 설치된 3국 협력사무국을 동 기구의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I. 동아시아 통합의 결정요인 -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통합은 정치적인 갈등, 역사적 반목, 상호 신뢰 부족 등의 장애가 남아 있고, 협력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지역통합의 의견조율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경험이나 전통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불리한 여건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건설노력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동체 추진노력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져야 할 통합전략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과거의 불리한 여건들 때문에  
역내 공동체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여건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

**〈표 1〉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경제, 정치·외교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

	(1) 경제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정치·외교적 요인	(3)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적 요인
양국 경제규모 합	0.403 (0.009)***	0.349 (0.010)***	0.256 (0.023)***
양국 경제규모 차	-0.164 (0.007)***	-0.157 (0.007)***	-0.195 (0.016)***
격지성 (동일 대륙 dummy)	-4.295 (0.322)***	-3.702 (0.337)***	-8.622 (0.795)***
군사동맹 여부 (dummy)		0.281 (0.013)***	0.098 (0.048)**
민주주의 발달 정도 지수		0.019 (0.001)***	0.058 (0.012)***
양국 간 문화적 차이 지수			-0.086 (0.035)**

주: \*\* 및 \*\*\*은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보고서 62쪽 (표 2-3)을 재구성한 것임.

**실증분석 결과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접근성이 중요**

하나의 시장, 하나의 문화,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 형성해 나간다는 장기적 비전이다.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통해 성장이라는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중기적으로는 사회문화 융합을 추진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을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치·외교 분야까지도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몇 국가들 간에 먼저 소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한 후 이를 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다경로(multi-track)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경제적 성과가 좋고 거시경제적 지표가 양호한 아세안 국가들을 점차 포함시키며, 최종 단계로 ‘아세안+3’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통합의 기본 방향과 전략은 관념적이고 단지 이론적인 추상의 결

과로 도출된 것이 아니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통합에서 확인하기 위해 1995~2010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형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에 기초하여 정치·외교, 경제, 지리 및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경제규모의 크기, 경제적 유사성 등 모든 경제적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지역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아울러 정치·외교 변수인 군사동맹 체결 여부와 민주주의 발달 정도의 계수추정치는 기대했던 대로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정치·외교적 요인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 간 문화적 차이가 작을수록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성 제고가 지역무역협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시장, 하나의 문화,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형성해 나가는 장기적 전략이 적절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통합의 확률을 추정하였는데,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및 지리적 요인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동아시아 통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한·일 FTA의 체결 확률은 76%를 넘고, 한·중 FTA와 중·일 FTA의 체결 확률은 각각 40%와 29%에 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국가와 역외 국가 간 FTA 체결 확률은 한국·미국이 22.5%, 일본·미국이 19.6%, 일본·프랑스가 16.9%, 한국·독일은 20.7%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통합 가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아시아 통합이 실현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합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곧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통합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아시아 통합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통상, 금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II. 동아시아 통합의 분야별 추진방안

### 가. 한·중·일 정부간 협력 현황 및 정치·외교 분야 협력

1999년 정상회의 출범 이후 한·중·일 3국 협력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계속해 2010년 현재 22개 분야별로 장관급 협의체로부터 실무자급 협의체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상설대화체를 만듦으로써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강화시켜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각국의 정책을 조정하고 구속력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협약'의 형식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 간 '합의'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경제분야에 비해 정치·외교 분야 협력의 제도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협력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치·외교 분야의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 및 미국의 지역동맹체제와 한·중·일 협력 간의 교집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상 수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협력의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상호 간 신뢰 구축 및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정치·외교 분야의 한·중·일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대효과가 높은 반면, 정치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전통적 안보위협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의제의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하다. 3국 협력사무국의 설치와 3국 협력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3국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통화금융분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통화금융 협력방안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아세안+3' 체제는 경제규모와 발전단계의 차이가 큰 국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더욱이 수혜국과 시혜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한국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아세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중국 및 일본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한국은 단지 자금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결정권은 구조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되

정치·외교 분야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의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제를 확대·개발할 필요

한·중·일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체 지역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야

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 실질적인 지역통화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체 지역협력으로 확대해 가는 2경로 전략(two track strategy)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국 간 구체적 협력방안은 크게 위기대응방안과 단계적 통화금융 통합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대응방안의 하나는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사용하여 한·중·일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3국 간 통화스와프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통화금융 통합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데, 제1단계는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공조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역내 통화단위의 사용을 민간부문까지 활성화하고 역내 환율협력 메커니즘(RERM)을 도입해 본격적인 정책공조를 시도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단일 통화를 도입하고 금융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통화금융 통합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는 재정정책의 조화·통합 없는 통화통합만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3단계로 나가기 전에 단일 통화의 필요성 및 재정정책과의 조화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다. 교육분야

향후 우리나라가 발전을 지속하고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FTA 허브나 금융허브와 더불어 교육허브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교육허브는 인적교류를 통해 상품이동과 자본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허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학생교류 중

우리나라를 동북아 학생교류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교육허브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위해 지역적 전략과 글로벌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심지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전략과 글로벌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 및 EU와의 FTA에 발맞추어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생이나 교원이 일방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학생들이나 교원들이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순한 교환학생제도를 탈피해 미래교육의 새로운 조류로 떠오르고 있는 공동 및 복수 학위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적 차원의 전략으로 한·중·일 3국의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해 출범한 캠퍼스아시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위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역내 교육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해서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지하고 이끌어 나갈 안정적인 신세대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시아대학의 설립, 공동연구, 직업교육 등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공동의 취업시장 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문화분야

2000년 이후 문화분야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 구체화된 협력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교류의 양적 증대는 명확한 중앙조정기관의 부재 속에서 여러 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외교적 또는 경제적 전략에 종속된 계기성 행사가 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류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으로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해 문화교류를 추진한다는 도구적 활용의 관점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적 질서를 평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패권주의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의 문화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첫째 유교문화권이나 한자문화권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블록 혹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사고함에 있어서 본질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그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역내의 동질적인 문화자산과 문화정체성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신에 밖으로는 인류의 확산과 안으로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마. 동북아 환경문제와 한·중·일 환경협력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는 크게 대기분야, 해양분야 그리고 사막화 문제와 국경하천 문제를 포함하는 기타 분야로 구분된다. 대기분야의 주요 환경이슈로는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장거리 이동과 침적 문제, 황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해양분야의 경우 육상기원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문제, 석유류 오염물질과 시안화물의 해양유입 문제 등이

포함된다. 기타 분야로는 중국 서북부와 몽골 남부 초원지역의 사막화 문제, 두만강, 압록강, 우수리강, 헤이룽 강 등 지역 국경하천의 수질오염 및 유역 생태계 훼손 문제가 주요 환경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국가 간 이동 및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문제도 지역 국가 간 초미의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한·중·일 환경협력은 크게 환경이슈와 협력이슈로 대별되며, 주요 협력방식으로는 공동 연구조사,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공동프로젝트 위주의 접근, 피해자 또는 수혜자 부담원칙과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오염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중국 지원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 통해 1) 동북아 환경장관회의의 장기적 발전기반 확보, 2)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정량적 산정이 가능한 모델링 기반 구축, 3) 환경기업체의 중국 진출 기반 마련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1) 공동관측망 및 정보공유시스템의 불안정성, 2) 후속 사업 또는 시스템의 상설화 추진의 한계, 3) 구속력 있는 협력체 발전 또는 환경개선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장치 미흡, 4) 중국의 소극적인 협력 자세 및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도한 주도권 경쟁 등의 한계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성과를 보완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의 효율화 및 제도화가 요구되며, 둘째 기존 협력사업의 성과와 각국의 역점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역할분담, 마지막으로 지역 환경현안, 특히 원전사고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등의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교류분야에서는

경제 또는 외교 전략에 종속된

계기성 행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교류정책이 필요

협력채널의 효율화 및 제도화와

함께 각국의 역점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역할분담이 동반되어야

### Ⅲ.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국가별 시각

#### 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일본의 시각 - 최근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움직임을 중심으로

(일본의 시각) 자유무역화의  
흐름으로부터 일본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일본의 TPP 참여는 향후 지역경제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협상이 국내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분야 등 국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동반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향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편, 고령화 진행으로 산업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무역자유화를 늦출 여유는 없다. 따라서 경제동반자협정 등 무역자유화의 흐름으로부터 일본도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형편이다. 미국의 TPP에의 참여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경제동반자협정 또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나.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중국의 시각

(중국의 시각) 아세안+3의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G20,  
지역금융개발기구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하여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도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중국이 발전하기에 적합한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동아시아 경제협력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의 지역경제협력은 주로 아세안이 핵심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거둔 동북아 3개국의 주도력이 부족하

며, 지역통화협력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지역통화협력과 지역무역투자협력,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각국은 지속적인 지역경제협력의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추진력이 부족하다. 중국은 지역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이익, 무역투자이익, 금융의 대외개방이익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몇 가지 전략적 대안으로서 중국은 아세안+3의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G20, 지역금융개발기구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한국의 시각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정치·외교적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새로이 대두하는 기회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통합의 단계적 접근으로서 동북아시아 3국 간의 경제통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3국 간 FTA를 실현시키는 방안으로는 두 국가 간의 FTA를 한국의 주도하에 체결한 후 나머지 한 국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NAFTA'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한·일 FTA가 우선이나 또는 한·중 FTA가 우선이나에 대해서는 상이한 주장이 가능하다. 그

런데 한·미 FTA 체결 확률이 한·일 FTA 및 한·중 FTA 체결 확률보다 낮지만 먼저 체결되었듯이 FTA 체결에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외교적 이익 등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한·일 FTA가 선행될 경우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통합관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유명무실해지며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통합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한·중·일 협력분야는 단순히 경제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역협정의 체결에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 요인의 근접성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통합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적으로는 사회문화 융합을 추진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을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치·외교 분야까지도 통합의 대상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정을 확보하는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 3국 간 근접성 제고를 위한 노력

〈표 2〉 한·중·일 경제통합의 단계적 접근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회원국 간 정책협력 (참고모델: OECD)	경제공동체 (참고모델: EC)	단일 시장, 단일 통화 (참고모델: EU)
추진기구	한·중·일 협력사무국	한·중·일+아세안 협력사무국으로 확대	EU 수준의 집행위원회 및 각료 이사회
정책과제	(한·중 FTA, 한·일 FTA) → 한·중·일 FTA	(한·중·일+아세안) FTA	상품·서비스·금융 시장의 단일화, 단일 통화 도입, 재정정책의 조화

이 경제분야 외에 정치·외교, 교육, 문화,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 모네가 유럽통합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언급한 “제도 없이 지속되는 것은 없다(Nothing is lasting without institutions)”라는 지적은 한·중·일 3국 협력에서도 유효하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경제적 협력과 지정학적 경쟁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한·중·일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도 거부감이 없는 수준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을 모색하고 상호 간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한다.”라는 OECD 수준의 제도화와 상통한다. 다음 단계는 EU 수준의 제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국 간에 초국가성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협력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초국가성을 포함하는 통합목표의 설정은 기존의 협력관계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EU 수준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OECD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기적인 목표인 EU 수준의 제도화로 가는 과정 중의 중기 목표로 EC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표 2).

(3국 간 FTA 실험방안으로서)

두 국가 간 FTA를 한국이

주도해 체결한 후 나머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야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 교육 등

포괄적 협력이 필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의

추진체로서 정부 간 다양한분야의

정책협력을 제도화할 필요

**동아시아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설립하고 3국 협력사무국을  
동 기구의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해야**

동아시아 통합 촉진을 위해 한·중·일 정책협력 관계를 OECD 수준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OECD를 참고 모델로 하여 3국 정부 간 다양한 분야의 정책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국의 합의하에 가칭 동아시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f East Asia)를 출범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료 이사회와 이를 대리하는 상주대표 이사회를 구성하고, 현재의 3국 협력사무국을 동 기구의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 연구보고서 집필진 ●

-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KDI 겸임연구위원
-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문우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박순찬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 진종현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伊藤元重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이사장 · 동경대학교 교수
- 何帆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 馮維江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